

		<b>보 도 자 료</b>		
		배포일시 2018. 1. 30.(수) 총 6매(본문3)	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정희, 사무관 지봉현, 주무관 김학희 • ☎ (044) 201-3737, 4846	
	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	담 당 자	• 과장 손세헌, 사무관 윤현봉 • ☎ (02) 2110-3793, 3795	
보 도 일 시		2018년 1월 31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30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국토부·법무부 맞손, 위급상황 시 CCTV 영상정보 실시간 공유 지자체 스마트시티센터 영상정보 활용...2월 서울·광주·대전서 시범사업

□ 앞으로 지자체 스마트시티센터\*는 성 범죄·강력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\*\*와 상시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를 강화한다.

\* 지자체가 방법·방재, 교통, 시설물 관리 등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정보시스템을 연계·통합 운영하는 센터

\*\*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특정범죄자(성폭력범, 미성년자 유괴범, 살인범, 강도범)의 위치확인, 이동경로 탐지, 전자장치로부터 발생하는 수신자료 관리 센터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, 이하 국토부)와 법무부(장관 박상기)는 1월 31일(목)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접근금지·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 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“스마트 도시 안전망” 구축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한다.

○ 구체적인 협력내용은 지자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, 스마트시티센터의 CCTV 영상정보 등을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제공하여 신속한 사건 해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.

- 지난해의 경우 전자장치 훼손,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 또는 여성 등을 대상으로 94건의 성폭행, 살인범죄 등이 발생했다.
- 그동안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하여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하므로,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어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
  - 앞으로는 전국 207개소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.
    - \* 공공보유 CCTV 95만 대('18.4, 행안부)를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연계 시 약 19조 원 (CCTV 대당 설치비 2천만 원×95만 대)의 안전자산 취득 효과 발휘 기대
  - 위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평시가 아닌, 개인 정보보호법에서 허용\*하는 전자장치 훼손,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(통상 00:00~06:00) 위반, 출입금지 구역에 진입,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해 접근한 경우로 한정된다.
    - \* 금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범죄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3자에게 제공 가능(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)
    - \*\*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CCTV영상 제공기록을 보존하고 인증된 자만이 접속 토록 하며, 망은 분리(망 연계 솔루션 사용)하여 구축 계획
-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 부처는 오는 2월부터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서울특별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 등 3개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- 한편, 국토부는 2015년부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자체와 112, 119 등 개별 운영되고 있는 국가 재난안전체계를

연계하여 현장 즉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\*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<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 추진 >

- ◇ (국토부-경찰청 MOU, '15.7) 납치·강도·폭행 등 112센터 및 출동경찰 지원
- ◇ (국토부-안전처 MOU, '15.9) 화재·구조·구급, 긴급 재난상황 119 지원
- ◇ (국토부-SKT 등 통신사 MOU, '16.7) 아동·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 긴급상황 지원
- ◇ (국토부-과기부·서울시 MOU, '17.11) 클라우드 기반 서울시(25구청 포함) 도시 안전망 구축
- ◇ (국토부-민간보안 MOU, '18.3) 민간보안(에스원·KT텔레캅 등)과 공공안전 연계

-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이정희 과장은 “부처 간 협력사업은 국가 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도 매우 크다”면서,
  - “이번 사업은 스마트시티 기반시설과 기술을 활용한 연계사업으로 미성년자, 여성 등을 성범죄·강력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의 안전이 크게 강화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지봉현 사무관(☎ 044-201-373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

## 업무협력 합의서

- 국토교통부 · 법무부 · 서울특별시 · 광주광역시 · 대전광역시 -

국토교통부, 법무부, 서울특별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와 위치추적관제센터(이하 “양 센터”라 한다)의 정보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증진과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, 다음 합의를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합의서는 양 센터의 정보시스템 연계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**제2조(협력분야)**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.

1. 전자감독대상자가 출입금지,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 공유 및 CCTV 영상정보의 제공
2.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·유기하고 시민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정보 공유 및 CCTV 영상정보의 제공
3. 긴급 상황 시 현장출동 보호관찰관, 경찰관의 신속한 조치 지원
4. 인공지능(AI), 안면인식 기술, 지능형 CCTV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연구·개발 협력 등

**제3조(시범사업)** ① 양 부처는 서울특별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협력사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한다.

② 본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 다만, 기본적인 비용의 분담은 다음과 같다.

1. 국토교통부는 피해자보호시스템·위치추적관제시스템과 통합플랫폼 간의 연계기술 개발(R&D) 및 구축, 타 지자체 확산을 지원한다.
2. 법무부는 소관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통신 네트워크 연결 시 임대망을 활용할 경우 그 임대료를 부담한다.
3. 서울특별시·광주광역시·대전광역시는 양 센터의 정보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구축비를 부담한다.

③ 기타 시범사업 및 확산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 부처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**제4조(상호협력 및 소통 활성화)** 각 기관은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공동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.

**제5조(효력 및 유효기간)** 본 협약서는 서명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며, 일방이 서면으로 종료를 요청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.

2019년 1월 일

국 토 교 통 부  
장 관 김 현 미

법 무 부  
장 관 박 상 기

서 울 특 별 시  
시 장 박 원 순

광 주 광 역 시  
시 장 이 용 섭

대 전 광 역 시  
시 장 허 태 정

## 참고2

## 스마트시티센터-위치추적센터 연계 서비스

### □ 서비스 개요

- 전자발찌 훼손, 금지행위 발생 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가 신속히 상황 파악 및 조치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센터의 CCTV 영상을 제공

### □ 기대효과

AS-IS	TO-BE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자발찌 이상징후 알람 시 관할 보호관찰소 직원이 GPS 신호추적 신병확보</li> <li>→ 관리인력 과다(1인 331명), GPS 오차, 전자발찌 훼손, 출동시간 등으로 소재 확인 및 검거에 애로 (필요시 경찰 지원 요청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스마트시티센터에서 인근 CCTV 영상, 도주경로 등을 지원받아 신속 검거</li> <li>→ 전자장치 착용자 관리 효율화 등으로 신속한 현장 확인과 검거 등 상황대처에 효과 (지자체, 경찰, 소방 등 상시 지원)</li> </ul>

### □ 서비스 시나리오

- ① 전자발찌 착용자가 위반 행위 시 위치추적센터에 알람 발생
- ② 즉시 스마트시티센터에 GPS 위치의 실시간 CCTV 영상을 요청·확보
- ③ 위치추적센터는 현장상황 파악 후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동 명령
- ④ 스마트시티센터는 현장 상황을 지속 추적하여 출동 보호관찰관 지원

